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8월 29일 총 3매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담 당 자 • 전기전력팀장 김영철 ☎440-4346 • 담당자 송창진 ☎440-435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발표 ... 시민 안전 챙긴다

-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소방 장비 확충에 50억 원 투입 -
- 완속 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
- 급속충전기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 화재감시 시스템 시설개선비 지원 -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

우선,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를 통해 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여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대형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건축 부문에 화재감시 시스템(열감지 카메라 설치 등)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반영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한 만큼,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